

‘수정 밀그림’ 공개… 논란 잠재우기

■ 정운찬 총리 ‘세종시 로드맵’ 왜 나왔나

부처이전 최소화… 첨단복합도시로 박근혜·총청 민심 설득 최대 걸림돌

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 9월말 취임 이후 세종시 수정추진의 총대를 맨 그가 여권 내부에서 ‘세종시 논란’이 걸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 구상의 밀그림을 우선 밝히고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민간합동위원회를 가동해 11~12월 여론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최종적인 정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로드맵의 골자다.

◇왜 수정해야 하나=정 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수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고,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 유지를 위한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 총리는 일자리를 위한 ‘자족기능유지’가 세종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해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세종시법으로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가 힘들고 궁극적으로는 당초 목표인 ‘복합도시’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면서 법개정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한편으로는 정 총리는 행정비효율도 지적하면서 “서울로 자주 다녀야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통일을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정 총리의 세종시 복안은 세종시를 자족이 가능한 첨단복합도시 내지는 기업도시로 만들어 9부2처2청을 이전한다는 원안을 수정,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은 축소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시간적 여유 갖고 다각도의 대안 마련 가능=정 총리는 우선 앞으로 3개월가량의 시간을 벌게됐다는 분석이다. 여론의 추이를 점검하면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한 셈이다. 정 총리는 그간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세종시 충돌 등을 겪고 정부가 ‘우왕좌왕’한다는 여론이 일자 큰 부담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이날 회견에서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에 국민과 국회의 큰 관심과 격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그런 만큼 한 달 동안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다”고 밝힌 것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기본 구상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 설득이 관건=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에 대해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라고 설명했다. 여권내 정치,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불씨인 것은 사실이다.

정 총리는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뒤로 한 채 50만 인구의 자족도시를 강조한 만큼 과연 얼마나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수정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 국민의 찬반 의견도 팽팽한 만큼 여론 설득 작업도 수정 추진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세종시 수정 반대에 사활을 건 자유선진당,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은 물론 총

청지역 민심을 얼마나 잘 파고들 수 있을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세종시 실무기획단’ 안에 총리 공보실과는 별도로 홍보지원팀을 마련한 것은 여론 및 홍보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이에 앞서 세종시 관련 여론을 수렴하고 대안을 심의하게 될 ‘민관합동위원회’ 위원 인선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15명 안팎인 민간위원들은 찬반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인사들로 구성돼야 하며,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도 자칫 파행을 빚어 위원회는 물론 내년 1월 제시될 최종안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 예산 확보, 누구든지 만나야죠”

오현섭 시장 여야 넘나든 발빠른 행보 주목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오현섭 여수시장의 여야를 넘나드는 발 빠른 예산 확보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4일 국회를 방문, 민주당 및 한나라당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 2012 여수엑스포 관련 예산 등 내년 국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주승용, 김승곤, 김창조 의원 등을 만나 여수시의 국고 확보 현황과 국회에서 추가로 예산 반영이 필요한 현안 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어 국회 예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이자 예결위원인 전남 출신의 이정현 의원을 만나, 여수



시의 내년도 국고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도 여야 예결위원은 물론 국회 여수엑스포 특위 전현직 위원들과 호남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활발한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여수엑스포 관련 예산 등 내년도 여수시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주승용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팀 플레이를 통해 굵직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투명 공천으로 내년 선거 승리”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일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을 자축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끝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선대위원회 해단식에 참석, “국민의 뜻을 거스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이번 재·보선선거에서 참패하고도 반성의 기색은커녕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공천과 인재채용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더 큰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의 심장부이자, 직전 대표가 출마한 양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예상 외로 선전, 한나라당 지도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며 “민주당이 부산·경남 쪽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불씨를 보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히 “중부4군에서 정병구 의원이 압승할 수 있었던 표를 양산으로 좀 나눠줄 걸 그랬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폭소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정 대표 외에도 이시종 충북도당 위원장, 강기정 의원, 장성민, 김성호 전 의원, 중부4군 선거대책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친노 신당 당명

‘국민참여당’으로

친노 신당의 당명이 ‘국민참여당’으로 결정됐다.

4일 국민참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민참여당’과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두 개의 당명을 놓고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명을 국민참여당으로 확정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참여당의 의미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시대정신과 함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당은 오는 15일 서울 종로 수운회관에서 창당준비위 결성식을 가질 예정이며 내년 1월17일 창당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창당준비위원장에는 현재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정부 발주 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강운태의원 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4일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해당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발주공사에 대한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대한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일방공사 기준으로 현행 30%에서 40%로 확



대하고, 턱공사에는 2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턱공사와 대안공사에는 해당 지역 건설업체가 2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경기침체의 여파와 대형 건설사의 수주물량 독점 등 때문에 극심한 운영난을 겪는 지방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세종시 드라이브속 파열음 고조

당정 협의·국민투표 등 놓고 충돌

한나라당 지도부가 4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을 빚었다.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세종시 해법’과 관련한 당내 기구 설치, 당정협의, 국민투표안, 총청 민심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실천은 홍준표 의원이 “더이상 당이 정부 뒤에 숨는 것은 옳지 않다. 당내 기구를 만들어 당에서 선제적으로 수정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당에 적극적 개입을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홍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친박(친 박근혜)

계 홍사덕 의원은 작심한 듯 정운찬의 ‘세종시 로드맵’을 소재로 당정간 엇박자를 문제 삼고 나섰다. 홍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대표와의 지난 2일 조찬회동을 거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었다면 당정간에 왜 그 이전에 논의나 토론이 없었는가”라며 “이런식의 당정이 무슨 협조냐. 당정 관계에 중요한 흥결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성진 최고위원과 차명진 의원이 세종시 해법으로 제시했던 국민투표안에 대해서도 “처음에 나쁜 지혜를 낸 사람은 ‘총청 사람은 전 국민의 4분의 1 밖에 안되니 국민투표를 하면 돌파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나플래यी이 국민투표를 처음 실시한 이래 이런 비겁한 국민투표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친박계인 송광호 최고위원도 “내년 지방선거의 캐스팅보트를 누가 갖고 있는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패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며 계획했던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동력이 솟아나겠는가”라며 “총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홍 의원이 너무 격정을 하신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여의도를 멀리하고 소외시키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달랬다.

/연합뉴스

www.gtt.com.kr

대호온돌나라

심대는 지금이 구입적기입니다.

	
3인용 침대 (3인용) 3,300,000	2인용 침대 (2인용) 1,000,000
	
2인용 침대 (2인용) 1,100,000	3인용 침대 (3인용) 1,000,000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대호온돌나라 ☎ 062-360-1902

www.aheris.com

아이엘리시아

출산차, 피로, 스트레스, 각종 모임 및 행사 (100여 원씩)

스모킹룸 :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대우룸) : 1인실, 2인실, 3인실

고급차, 피로, 스트레스, 각종 모임 및 행사 (100여 원씩)

062-671-1199